무주 적상 중리마을 "태양광발전소 건립 안돼"

주민들 "자연훼손 · 농작물 피해 · 산사태 등 우려"

무주군 적상면 일대 3개 (상 · 하 · 중 중리) 마을 주민들은 마을 상단부 위치한 농림지역과 보전관리지역 1만 9천여㎡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25일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해 8월 한 사업체가 마을 인근인 적상면 포내리 668-1일대에 설비용량 2천343kW의 태양광발전허가를 받기위해 추진 중이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주민들은 이 지역은 국립공원 덕유산과 적상산을 보자기처럼 감싸고 있는 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 태양광 발전소가 들어설 경우 자연훼손은 물론 태양광 반사빛에 의해 농작물 피해와 사람 · 가축에 이르기까지 피해가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예정부지 인근에는 산사태 위험이 뒤따라 최근 군이 사방댐을 설치한 지역으로 산림훼손에 따른 토사 유출과 산사태가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개발행위를 앞두고 기본적인 절차인 주민 전체 설명회조차 열지 않은 것을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행정당국의 허가 불허를 촉구했다.

또한, 태양광발전시설 예정부지 인근에는 초등학교와 가옥 등 시설이 많아 피해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무주군 적상면 일대 3곳(상 · 하 · 중 중리)에 태양광 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태양광발전소 건립 반대 현수막.

중리마을 태양광발전사업반대책위원회는 120여명의 주민에게 서명을 받아 지난 24일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어 군청 앞에서 태양광발전소건립 반대를 위한 집회를 오늘 오후 약 2시경부터 무주군청 쉼터 주차장앞에서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다.

주민 이봉명(64)씨는 대대손손 청정지역으로 보존하고 가꾸어 4대째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고 있고 최근에 귀농 · 귀촌 객이 줄을 잇고 있는데 웬 날벼락인지 모르겠다"며서 "자연환경 파괴, 훼손을 막아 살기 좋은 마을로 대대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태양광발전 건립을 강력히 반대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관련부서 팀장말에 따르면 아직 허가가 난 상태도 아니고 심의위원들이 받아들여야 결정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양연수 덕진구청장 39년 공직생활 마무리

전주시 양연수(59) 덕진구청장이 39년간의 공직생활을 마감한다.

25일 양연수 덕진구청장은 "건강상의 이유와 같은 직렬의 후배들에게 길을 열어주고자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양 구청장은 지난 1980년 지방 토목직렬로 전주시청에 입문한 후 39년간 전주에서만 공직생활을 이어왔다.

그는 전주시청에서 도시계획팀장과 대회협력담당관, 안전총괄과장, 신도시사업과장, 생태도시국장, 지난 2018년 7월부터 덕진구청장으로 재직했다. /송효철 기자

음주운전 단속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한 윤창호법이 시행된 25일 전북 전주시 동전주 IC에서 경찰 관계자들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전국 지역자활센터 '총 집결'

전주시, 연수 유치… 27~28일 자활사업 발전방안 논의

전국 자활사업 기관 · 단체 관계자들이 전주에서 자활사업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펼친다.

전주시는 전국 14개 광역자활센터와 249개 지역자활센터 대표, 중앙자활센터 원장, 한국자활연수원 원장, 지부 사무국장을 비롯한 국내 자활사업 기관 및 단체 관계자 등 총 300여명이 참가하는 '2019년도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연수'를 오는 27일과 28일 전주 웨딩팰리스와 로니호텔, 전주한옥마을 등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한국지역자활센터협회 주최로 열리는 이번 연수는 급변하는 국내 자활사업 제도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한 정보를 공유하고자활 사업 현장의 목소리를 결집해 국가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대해 이성원 전주시 사회적경제지원단장은 "전국 자활사업의 현장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이 전주에 모여 올해 발전적인 사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나아가 미래 자활사업전반의 생산적인 정책 반영을 위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자활사업의 성공 추진 의지와 함께 전주가 가진 천년 전통 문화의 풍성함도 함께 가슴에 담아갈 수 있도록 행사 준비와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주지역 자활센터와 덕진지역 자활센터 등 2개의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돌보미 간병사업과 크린스타트 청소 사업 등 총 29개 사업장에서 326명의 참여자가 근무하고 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의회 공무국외 출장 심사위원 신규 위촉

전주시의회가 공무국외 출장을 심사하는 심사위원 전원을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인 등 민간위원으로 모두 위촉했다.

시의회는 25일 모두 5명으로 구성했던 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위원을 7명으로 늘리고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했던 2명의 시의원을 제외하는 대신에 시민사회단체와 법조계 인사 및 지역 언론인 등을 포함시켰다고 밝혔다.

시의회가 심사위원을 바꾼 것은 의원이 자신들의 국외출장을 심사한다는 이른바 '셀프심사'에 따른 비난과 오해를 불식시키고 그동안 시민사회단체와 언론 등이 제기한 외유성 출장을 차단하는 것과 함께 의원들의 국외출장을 당초 취지에 맞게 추진한다는데 목적이 있다.

이날 새롭게 위촉된 위원은 법조계 성훈 변호사를 비롯해 시민사회 단체에서 참여자치 전북시민연대 김남규 정책위원장과 시민행동 21 김종만 공동대표, 지역 언론에서 MBC 한범수 기자 등이며 나머지 3명은 기존 위원들로 내년까지 심사를 맡는다.

/송효철 기자

'제2 윤창호법' 시행 첫날

도내서 3명 음주단속 적발

각각 0.205% · 0.12% ·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

음주운전 단속기준이 강화된, 이른 바 '제2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개정법 시행에 맞춰 전북경찰이 시행한 특별단속에서 음주 운전자들이 적발됐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음주단속 강화 첫날인 이날 자정부터 도내 번화가와 대학로 등 음주사고 다발지역에서 총 3명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

경찰은 적발된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205%, 0.12%, 0.094%로 모두 면허취소 수치였다고 설명했다.

이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이면 면허정지, 0.1% 이상이면 취소 처분이 각각 내려졌지만, 이번 개정법을 통해 면허 정지 기준을 0.03% 이상, 면허 취소는 0.08% 이상으로 한층 강화됐다.

또한, 면허정지 수준의 수치가 나타나도 음주단속에 2회 이상 적발 시 면허취소를 받게 되는 행정 처분도 강화됐다.

한편, '윤창호법'은 작년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온 윤창호(당시 22)씨가 부산에서 만취 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진 사건을 계기로 시행됐다.

같은 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개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다. /강석훈 기자

완주 한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와 함께 여성 시신 발견

전북 완주의 한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에서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여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오전 8시 47분경 완주군 화산면 경천저수지에 쏘나타 승용차가 빠져 있는 것을 낚시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낚시를 하고 있는데, 물 속에 승용차가 빠져 있다'는 내용이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119구조대는 저수지에 빠져 있는 승용차 운전석에서 여성 시신을 발견했다.

경찰관계자는 "시신의 부패가 심해 정확한 사망 경위나 신원을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며 "부검 등을 통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청년들이 살기 좋은 전주 만들기 '힘 모아'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 개최… 사업 추진방향 논의

전주시가 전주지역 청년, 각계각층의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청년들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시는 25일 시청 4층 회의실에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점검키 위한 '2019년 제1차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청년희망도시 정책위원회는 전주시 청년희망도시 구축을 위한 조례에 따라 지난 2016년 12월부터 전주시장과 시의원, 교수, 청년 등 각계각층의 인사 20명으로 구성 · 운영되고 있으며, 이들은 효과적인 청년정책 시행을 위해 연 2회 회의를 열고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정책위원들은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소통 · 거버넌스 △고용 · 일자리 △복지 △교육 · 사회 · 문화의 4개 영역의 주요 과제들을 검토하고 영역별 사업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확대 방안 △창업 인큐베이팅 기반 강화 △청년쉼표 프로젝트 추진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고 청년센터 및 온라인플랫폼 구축 등 신규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앞서, 시는 가장 큰 고민거리인 취업부터 소득 · 부채 · 주거 · 결혼 등 복합적인 문제를 안고 살아가는 우리 시대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2022년을 목표로 한 청년희망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들과 각계 각층의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 전주시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마련하고, 청년들이 행복한 청년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강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개강식이 지난 24일 전주도시혁신센터에서 수강생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단순한 교육을 넘어 연대와 협력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과 가치 실현을 위해 기획된 것으로 전주시와 전주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전주사회경제네트워크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날 첫 교육에는 교육과정 소개에 이어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의 '지역 통합돌봄 체계구축의 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한 '커뮤니티케어' 분야의 강의가 펼쳐졌다.

이번 사회적경제 아카데미는 이날 첫 강의에 이어 매주 월요일 △사회적 농업(정안성 전북대 농업경제학과 교수) △사회적금융(주세운 동작신협 사회적금융센터 과장) △향토극장과 사회적경제(김남훈 모두를 위한 극장 공정영화협동조합 운영위원) △사회적경제와 도시재생(전은호 목포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을 주제로 이어질 예정이다. /송효철 기자

'원룸 동거녀 폭행 · 살해 · 암매장' 주범 2명, 항소심서 감형

'원룸 동거녀 폭행 · 살해 · 암매장 사건'의 주범 2명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25일 상해치사 · 사체유기 · 오욕(汚辱) 등의 혐의로 기소된 A모(24)씨와 B모(23)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8년과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6년과 1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 대해선 1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 · 청소년, 장애인 관련 기관의 취업제한을 명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5월 12일 오전 9시경 군산시 소룡동 한 원룸에서 지적장애 3급인 C모(당시 23 · 여)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야산에 묻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또 C씨를 성폭행하기도 했다. A씨 등은 C씨가 숨지자 지인들과 함께 시신을 야산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수사기관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피고인들과 피해자는 지난 3월부터 원룸에 함께 살았다. 마땅한 직업이 없었던 C씨는 청소와 걸거지 등 집안 살림을 맡았지만 A씨 등은 집안일을 잘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C씨를 수시로 폭행했다.

사건 당시도 C씨는 집안일을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을 당했고, 끝내 숨졌다. A씨 등은 자신들의 폭행으로 인해 C씨가 숨지자 시신을 집에서 20㎞가량 떨어진 군산의 한 야산에 시신을 유기했다.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뒤에도 C씨가 매장된 야산에 수차례 방문해 토사 유실여부를 확인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후 지난해 6월 말 폭우로 매장지 토사가 일부 유실되자 시신을 인근 야산에 다시 매장했으며, 이 과정에서 시신의 부패를 빨리 진행시키기 위해 화학물질을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폭행으로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것이 명확히 입증이 안 됐고, 살인의 고의도 없었다고 판단, 상해치사죄를 적용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부검 결과 폭행으로 인해 살해됐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점, 당시 C씨가 단순히 기절했다고 생각했다는 피고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들이 폭행 당시 살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체 매장과 오욕 등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도 "A씨의 경우 수사초기부터 범행 자백과 반성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B씨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감형 사유를 설명했다. /강석훈 기자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 상수도 관리체계 강화

위기대응 지침 재정비 등

최근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돗물 적수사태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된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이 이용하는 수돗물에 대한 점검 및 관리를 강화키로 했다.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본부장 강승권)는 지난달 30일에 발생한 인천적수 사태를 계기로 전주시 전역에 분포된 상수도 시설에 대한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비상사태에 대비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등 수돗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는 모든 공사의 제수밸브 조작 시 전담관리 요원의 철저한 입회하에 충분할 시간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는 이번사태를 계기로 위기대응 지침(메뉴얼)을 재정비해 대응체계를 재점검하고 퇴수밸브 및 소화전을 개방해 노후관 침전물 퇴수 및 관세척을 주기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급격한 상수도 밸브 조작으로 인한 관내 유속 변경으로 녹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전담인력 확인 후 충분한 퇴수 후 밸브 개폐를 추진키로 했다. /송효철 기자

구독 · 광고문의
288-9700

제195회 전주 열린시민강좌 성료

제195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5일 시민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주시청 강당에서 열렸다.

이번 열린시민강좌는 세계탐험뉴스 발행인이자 여행전문 작가로 활동 중인 노미경 강사가 '꿈은 이루어진다'를 주제로 강연했다.

노 강사는 강연에서 서아프리카, 부탄, 남프랑스 등 본인이 여행지에서 현지인들과 부대끼며 직접 체험한 다양한 경험들을 생생하게 풀어냈다.

특히 노 강사는 △여행을 위한 필수요소-여행지 관련 서적 준비, 지역에 맞는 물품 준비 등 상세하고 유익한 정보들을 전달했다. /송효철 기자